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중국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3년 7월 19일 | 책임조사역(G3) 박선미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9,597천 km ² 	인구 14.1억 명 (2022°) 	정치체제 사회주의 인민공화제 	대외정책 전방위 실리 외교 
GDP 18.1조 달러 (2022°) 	1인당GDP 12,814달러 (2022°) 	통화단위 元 (RMB) 	환율(U\$기준) 6.74 (2022)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약 14억 명의 인구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한 수출·투자 주도형 경제 정책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함.
- 중국은 수년 간 경제성장을 유지할 위해 다수의 지역개발 및 산업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통한 투자자금 조달, 기업들의 투자 용도 차입 확대로 부채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바, 3대 경제주체(정부, 기업, 가계)의 높은 부채비중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시진핑 주석은 2018년 개헌을 통해 국가주식 임기를 폐지하여 장기집권 체제를 마련하였으며, 2022년 10월 23일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어 정치적 안정과 정책 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미·중 패권 경쟁 외에도 대만과의 관계, 남·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다방면에서 서방 및 아세안 국가 등 여러 국가들과의 갈등이 대두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8. 24 수교 (북한과는 1949. 10. 6)

주요협정 무역협정('92), 투자보장협정('92), 과학기술협력협정('92), 이종과세방지협정('94), 형사사법공조조약('00), 민사상사사법공조조약('05), 투자증권보호협정('07), 사회보험협정('13), 기후변화협력협정('15), 영사협정('15), 자유무역협정('15)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출	132,565,445	162,912,974	155,789,389	반도체, 합성수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08,884,645	138,628,127	154,576,314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해외직접투자현황(2023년 3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28,539건, 92,358백만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f
경제성장률	6.0	2.2	8.5	3.0	5.2
소비자물가상승률	2.9	2.5	0.9	1.9	2.0
재정수지/GDP	-6.1	-9.7	-6.0	-7.5	-6.9

자료: IMF, 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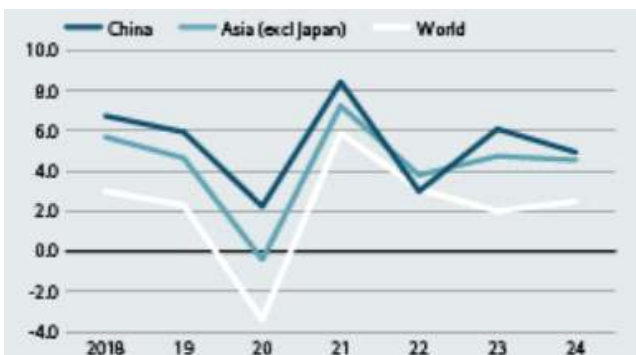
부동산 부문 리스크 지속 등으로 2023년 대내외 경기하방 압력 지속 예상

-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인해 3.0% 이하 저성장애 그친 2020년(2.2%) 및 2022년(3.0%)을 제외하면 아시아 평균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2023년 코로나19는 완화되었으나, 세계경기 둔화, 고물가 지속, 부동산 시장 위축 등 대내외 경기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해 건설 부문 전·후방 산업도 함께 위축되었으며, 부동산 기업의 디폴트 증가는 관련 채권 가격 하락,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중국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비함.
- 중국의 2023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6.3%로 1분기(전년 동기 대비 4.5%)보다는 높으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과 기저효과 등을 감안한 당초 예상치(Reuters 집계 7.3%)에는 미달함. 소매판매 증가율은 4월 18.4%, 5월 12.7%에서 6월 3.1%로 급락하는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 중국 정부가 2023년 3월 개최된 양회에서 제시한 2023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5% 내외로, 1994년 양회 개최 이후 최저 목표치임. IMF도 4월 9일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중국의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5.2%로 전망함. 중국 정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무역 둔화, 미·중 갈등 등 외부 불확실성 속에서 일자리 확대 등 내수 진작에 집중하여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전망이다.

* 중국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 IMF 5.2%, 세계은행 5.6%, IHS Markit 5.5%, FitchSolutions 5.2%, Goldman Sachs 5.4%

[그림 1] 중국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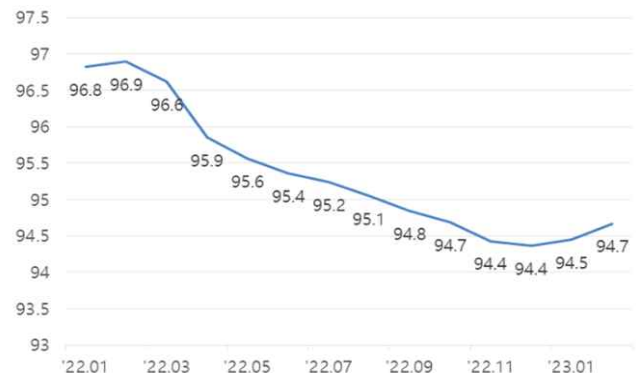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EIU

[그림 2] 중국의 부동산 시장 경기지수 추이

(단위: %)



자료: 중국 국가 통계국, CEIC, KIEP

국내경제

중국 정부, 디플레이션 가능성 일축하였으나 우려 여전

- 중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아시아 및 세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1~3%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었음.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p 상승에 그친 1.9%를 기록함. 한편, 2023년 5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하락,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6% 하락, 전월 대비 0.9% 하락을 기록하여 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자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됨.
- 영국 Economist 등 다수의 경제 전문지 및 예측기관들은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으로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듯하다가 다시 경기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더블딥'의 가능성을 언급함.
- 또한, 중국의 5월 수출액은 공급망 마찰로 미국, 일본, 동남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으로의 수출이 각각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으며, 구매자관리지수(PMI)는 4월부터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 50 아래로 떨어져 두 달 연속 위축 국면에 하락세를 이어감.
- 한편, 2023년 5월 15일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1분기 중국 통화정책 집행보고서'에 따르면, 디플레이션은 물가의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과 동시에 화폐 공급량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경기 침체를 동반하지만, 현재 중국의 물가는 여전히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강한 경제 반등이 예상된다며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일축함.
-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열린 양회(兩會)에서 외부 요인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관리목표를 전년과 동일한 3%대로 설정하여 관리하겠다고 밝힘.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당분간 재정적자 지속 전망

-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 교육·의료 등 민생 관련 재정지출이 매년 증가하는 한편,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세금 환급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치면서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치(GDP의 -9.7%)를 기록함. 한편, 잠잠했던 코로나19가 2022년 하반기부터 재확산되자 중국 정부는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여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6.3% 감소하였으나,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하여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의 재정적자(GDP의 -7.5%)를 기록함.
- 한편, 중국은 출산율 저하 등의 영향으로 60세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2021년 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9%를 차지하였으며, 2025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생산가능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지고 정부 재정 지출 압박이 커짐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3월 9일 열린 양회의 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2년째 이어오던 재정적자 축소 기조에서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로 전년 대비 0.2%p 소폭 높여,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경제성장애 초점을 두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엿보임.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f
경 상 수 지	102,910	248,836	352,886	401,855	446,878
경상수지/GDP	0.7	1.7	2.0	2.2	2.3
상 품 수 지	392,993	511,103	562,706	668,633	647,500
상 품 수 출	2,386,640	2,510,015	3,215,838	3,346,875	3,448,893
상 품 수 입	1,993,647	1,998,912	2,653,132	2,678,242	2,801,393
외 환 보 유 액	3,107,924	3,216,522	3,250,166	3,127,691	3,131,125
총 외 채	2,070,811	2,400,807	2,746,600	2,481,505	2,693,637
총외채잔액/GDP	14.5	16.2	15.5	13.7	13.9
D.S.R.	9.8	11.2	10.4	11.7	9.5

자료: IMF, EIU, OECD

2022년 경상수지는 14년 만에 사상 최대치 흑자 시현

- 2022년 중국의 경상수지는 전년 대비 13.8% 증가한 4,01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14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시현함. 상품수지는 전년 대비 18.8% 증가한 6,68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서비스수지 적자도 2019년 대비 65%, 전년 대비 8.8% 감소 등 매년 적자 폭이 감소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전년(2.0%) 대비 증가한 2.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3년 5월 12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 1분기 상품수지는 1,299억 달러로 역대 1분기 기록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서비스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58% 감소하여 47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 상품수지 흑자 및 서비스수지 적자 폭 감소 등으로 경상수지는 82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GDP 대비 2.0%로 안정적인 구간이라고 밝힘.
- 한편,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풀고 경제활동을 재개(리오프닝)하였으나 그 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이며, 부동산 시장 침체, 미·중 간 무역전쟁에 따른 교역여건 악화 등이 경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표 1] 중국 경상수지 구성 현황(억 달러)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f
상 품 수 지	3,930	5,111	5,627	6,686	6,478
서 비 스 수 지	-2,611	-1,525	-1,012	-923	-580
본 원 소 득 수 지	-392	-1,182	-1,245	-1,936	-1,623
이 전 소 득 수 지	-416	85	159	191	197

자료: IMF, EIU

외채상환능력

월평균수입액 약 11개월분 이상의 양호한 외환보유액 유지, 외채상환능력도 양호한 수준

- 2022년 말 외환보유액은 3조 1,277억 달러이며, 이는 월평균수입액의 10.7개월분에 달하는 수치로 최근 5년 이상 꾸준히 3조 달러를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임.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11.7%로 외채상환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중국 외환보유액(억 달러): 31,079('19) → 32,165('20) → 32,501('21) → 31,277('22)

- 또한, 중국은 2022년 11월부터 금 보유량을 늘리기 시작했으며, 2023년 4월 말 기준 보유 중인 금 가치는 지난해 말 대비 151억 증가한 1,324억 달러임.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 보유량을 늘림으로써 보유자산 가치의 변동 폭을 최소화하고 외환보유고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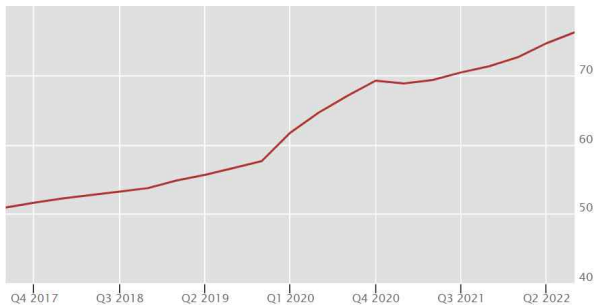
구조적취약성

3대 경제주체(정부, 기업, 가계)의 높은 부채 비중 관리 필요

-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중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17년 말 54.9%에서 2022년 말 77%로 최근 6년 간 급증하였으며, GDP 대비 기업(금융 부문 제외)부채 비율은 220%(2017년 말 205%)로 G20 국가 평균(133%)보다 높은 수준임. 이는 중국 정부가 수년 간 경제성장률 유지를 위해 다수의 지역개발 및 산업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통한 투자자금 조달, 기업들의 투자 용도 차입이 확대된 결과로,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채 증가속도가 더욱 높아졌음. 최근 기업(금융 부문 제외)부채 비율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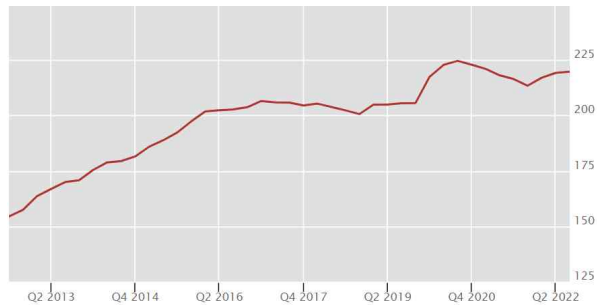
* 정부부채/GDP(%): 54.9('17) → 56.5('18) → 60.8('19) → 71.3('20) → 71.7('21) → 77.7('22)

[그림 3] 중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단위: %)



자료: 국제결제은행(BIS)

[그림 4] 중국의 GDP 대비 기업(금융 부문 제외)부채 비율 (단위: %)



자료: 국제결제은행(BIS)

- Bloomberg에 따르면(2023년 2월) 중국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꼽히는 중국 31개 지방정부 가운데 최소 17곳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2022년 미상한 차입금이 중국 정부가 정한 한도(세수의 12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됨. 2022년 말 기준 지방정부 부채 잔액은 35조 위안(약 6,530조 원)이며,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특수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이나 건설사에 부채를 떠넘기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 부채까지 감안하면 지방정부 부채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대부분의 중국 지방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낮은 세수로 인해 재정적자를 겪고 있으며 이를 탈피하고자 3,191억 원 상당의 석조 불상 운영권 매각, 238억 원 상당의 장례식장 운영권 매각 등 다양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임.

[표 2] 중국의 중앙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 규모 추이

(단위: 위안)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중앙정부부채	15조	17조	21조	23조	-
지방정부부채	18조	21조	26조	31조	35조
정부부채/GDP	53.8%	57.2%	68.1%	71.5%	76.9%

자료: Wind, IMF, 한국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

- 한편, 2023년 3월 개최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교통·건설 인프라 등 제14차 5개년 계획 중 주요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한 지방정부 전용채권 발행한도를 전년보다 0.15조 위안 증가한 3.8조 위안으로 설정, 지방정부 부채는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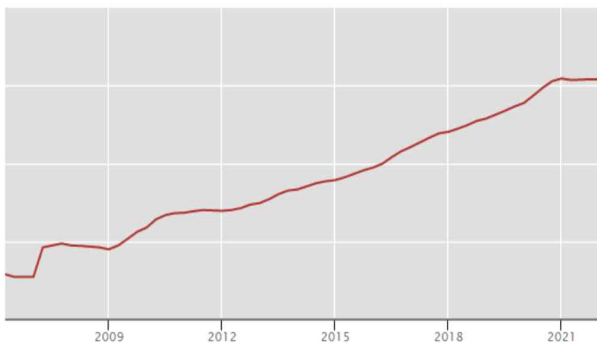
구조적취약성

- 또한, 2022년 말 중국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62%로,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 5년 간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위한 대출 증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하강 등으로 인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한편, IMF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5% 이상이면 금융시장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은 해당 기준선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음.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1%(2006) → 27%(2010) → 36%(2014) → 52%(2018) → 62%(2022)

- 2021년 2분기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자료에 의하면 중국 가계부채의 60%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며, 중국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78%를 차지하는 등 부동산 대출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21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소비자 심리 악화 등으로 부동산 수요가 위축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한편, 부동산 수요 감소가 주택의 가격 하락 및 판매량 감소로 이어져 부동산 개발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며 이는 주택 완공 지연 및 중단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음. 2022년 6월 이후 119개 도시 344개 단지 이상의 입주 지연 피해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등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2022년 11월 11일 중국 정부는 공사 중단 부동산에 대해 추가로 관련 대출 취급, 부동산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 만기 연장 허용, 우량 부동산 기업의 채권 발행 지원, 개인주택대출 요건 완화 및 대출상환 기간 조정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내용을 발표함에 따라 당분간 부채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23년 6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기존 연 4.3%에서 4.2%으로, 1년 만기 LPR도 연 3.65%에서 3.55%로 10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각각 0.1%p 인하함. 보통 1년물은 신용, 기업대출,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사용함.

[그림 5] 중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 (단위: %)



자료: 국제결제은행(BIS)

[그림 6] 중국 기준금리 변동 추이(5년 만기 LPR) (단위: %)



자료: Trading Economics

- 국가총부채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부문에서 부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부채위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구조적취약성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지속

-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가 소비자 심리 악화, 부동산 개발기업 부실에 따른 공사 중단 등으로 이어지면서 주택 판매량 및 가격이 하락, 중국 GDP의 약 30%(2022년 기준)를 차지하는 주택 시장을 필두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음. 한편, 2020년 기준 중국 건설사 중 자산규모 1위 및 2021년 기준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22위의 헝다그룹을 포함한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자금난에 봉착하면서 공사 중단 미분양 증가 등 중국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됨. 헝다그룹은 2023년 3월 23일 파산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였음.
- IMF는 최근 보고서(2023년 2월)에서 중국 정부가 부동산 기업에 대한 금융 완화 및 추가 대출 시행 등으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은행들의 익스포저가 늘어남에 따라 잠재적 부실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면 시장 전체를 재편할 수 있는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함.
- 2023년 6월 중국 정부는 일부 도시의 계약금과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등 주택 구매와 관련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여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여, 추가적인 부동산 시장 부양책이 계속 발표될 것으로 보임.

성장잠재력

2023년에는 안정적인 경제정책과 경제의 질적 발전 추진

- 2023년 중국 경제정책을 전망할 수 있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2022년 12월 15~16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음. 동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2023년 경제는 소비 회복과 내수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수출과 선진 기술, 에너지 자원 등의 수입도 적극 확대하며 국내 순환과 더불어 국제 순환을 위한 노력도 함께할 것임을 언급함.
- 또한, 중국 산업의 핵심기술과 취약기술을 파악하여 자주적으로 통제 가능한 산업 사슬을 확보해나가기 위해 산업 공급망과 전략물자 확보 전략도 2023년 경제정책에 담았으며, 주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국내 탐사로 비축량과 생산량을 늘려 국가 전략물자 비축 능력을 강화할 예정임을 밝힘.
- 한편,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 등 중국 금융당국도 2023년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함. 인민은행은 유동성 유지를 위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금융 리스크 완화에 중점을 둘 전망이며, 중국 금융당국은 소비 회복, 부동산 금융 지원에 주력하는 동시에 외환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임.
- (인민은행) 2023년 1월 4일 인민은행은 2023년 7대 중점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①충분한 유동성 유지를 위한 통화정책 시행(자금조달비용 감축 도모, 위안화 환율 안정성 유지 등), ②내수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소비 회복 지원 및 부동산 시장 금융지원 시행 등), ③금융 리스크 예방(금융안전보장기금 관리제도 개선 등), ④거시건전성 관리체계 개선(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⑤대외개방 확대 및 국제금융협력 유지(규정·제도 등 개방 확대 및 G20 업무 주도적 추진 등), ⑥금융개혁 추진(외환 분야 개혁·개방 확대 등), ⑦금융 서비스 향상(디지털 위안화 지속 확대 등).
- (국가외환관리국) ①외환 부문 개방 확대(국경 간 금융 서비스 플랫폼 개발 등), ②국경 간 자금 모니터링 강화(외환시장 모니터링 및 연구 강화 등), ③외환보유액 운용방법 개선(시장지향적인 제도 구축 등), ④외환관리 기본 강화(디지털 외환관리 시스템 구축 등).
- (은행보험감독위원회) ①소비 회복 확대와 농촌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②부동산 시장 금융지원 16개 조치 시행, ③중소은행 개혁 가속화(농촌은행 개혁 추진 등), ④비은행기관에 대한 개혁 등.

제도적 개방 확대 등으로 외자기업 투자 확대 전망

-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중국 내 외국자본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2천 684억 4천만 위안(약 50조 9,901억원)이며, 업종별로는 하이테크 산업이 32%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
- 향후 중국은 외자기업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도적 개방을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개방 플랫폼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외자기업의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정책성과

경제지표 부진 영향 등으로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며 위안화 가치 하락

- 2022년 11월 달러당 7.3위안까지 절하됐던 위안화는 2022년 12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초강력 봉쇄정책을 사실상 종료하고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밝히자 2022년 12월 30일 달러당 6.675위안으로 절상되었음. 그러나 2023년 상반기에 나온 각종 지표를 통해 중국의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자 외국인 이탈 등으로 인해 2023년 7월 11일 현재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여 위안화 가치가 다시 최저치로 떨어짐. 한편, 미국 금리 인상 기조가 주춤하고 중국 내 외국인 이탈 압력이 약화되는 2023년 중반 이후에는 위안화 가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23년 5월 18일 중국 외환시장지도위원회는 선진국들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으며, 또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자 공매도 세력이 위안화 가치 하락에 베풀어 외환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함. 이에 인민은행과 외환국은 외환시장 관리·감독·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기와 환율 급변동 억제에 다양한 노력을 기할 것이라 밝힘.

[그림 9] 미 달러당 위안화 환율 추이



자료: TradingView

무역 거래 시 위안화 결제 비중 증가 노력 지속

- 중국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에 걸쳐 위안화의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일부 국가들이 탈달러화에 나서자,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위안화의 국제결제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시도함.
- 위안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중국 경제의 성장에 따른 자본시장 개방 확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일대일로를 토대로 한 위안화 권역 확대 등으로 추정됨.
- 다만, 위안화의 제한적 태환성, 중국의 폐쇄적 자본계정 등으로 인해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과 활용 전망은 여전히 미지수임.

정책성과

'부채의 덩어리'라는 비난 속에서 10주년 맞이한 일대일로 정책

- 2013년 중국은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21세기 버전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만든다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시작함. 지난 10년 간 150개국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9,62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됨. 금전적인 문제로 인프라 건설을 할 수 없는 개도국들에 중국 자금으로 중국 기업이 인프라를 건설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자원이나 시설 운영권*을 가져가는 등의 정책으로 개도국들은 능력 대비 과도한 부채를 떠안게 됨.

* 2017년 스리랑카 함반토다 항구 운영권, 파키스탄 남서부 과다르항 운영권 등

- 또한, 기술력 부족으로 붕괴에 처한 댐, 가동 중단한 수력발전소 등 부채뿐만 아니라 인프라 유지, 재건설 비용까지 증가해 위태로운 상황임. 이는 중국이 일대일로 확장에만 열중해 국가별 추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및 재건 능력 등은 고려하지 않아 벌어진 사태로, 중국이 놓은 '부채의 덩어리'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음.
- 중국은 막대한 자금 투입,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완성을 강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일대일로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한다고 밝힘. 다만, 직접 비용을 투입하는 인프라 건설보다는 공사능력을 갖추 현지 기업에 중국 민간기업이 직접 자금을 투자하여 건설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여 진행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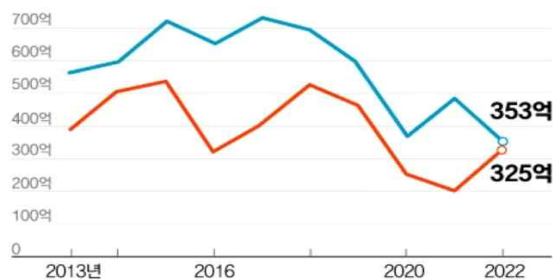
[그림 7] 중국의 육·해상 실크로드 일대일로



자료 : 월간중앙

[그림 8] 일대일로 투자 형태

단위: 달러 ● 건설 투자액 ● 직접 투자액



자료 : 푸단대 녹색금융개발센터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중국은 64개국 중 21위로 전년 대비 4단계 하락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평가대상 64개국 중 21위를 기록하여 국가경쟁력이 전년 대비 4단계 하락함. 분야별로는 인프라 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이고, 경제 성과, 기업 효율성 및 정부 효율성 분야에서는 순위가 하락함.

* 13위(2018년) → 14위(2019년) → 20위(2020년) → 16위(2021년) → 17위(2022년) → 21위(2023년)

-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의 총 4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중국의 인프라는 21위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경제 성과, 기업 효율성 및 정부 효율성 분야는 전년 대비 4단계, 6단계, 6단계 하락하여 각각 8위, 21위, 35위를 기록함.

정치안정

시진핑 3연임 확정에 따른 1인 장기집권 체제 구축

- 시진핑 주석은 2018년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직 연임 제한을 폐지하고, 공산당 중심의 통일된 집권체제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함. 2022년 10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고, 2023년 3월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임기 5년의 시진핑 3기 지도부를 공식 임명함. 시진핑 주석은 3연임 확정으로 27년 간 집권했던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15년 이상 집권하는 중국 지도자가 됨.
- 장기집권 체제 구축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은 당을 앞세워 국정 전반을 휘두르는 '강당약정(強黨弱政)'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됨. '강당약정(強黨弱政)'은 당의 지도력은 강화하고 국무원의 위상은 약화시키려는 체제로, 정부부처는 단순 업무 처리하는 조직으로 기능이 약화되고, 핵심 업무는 당이 주도하게 되어 당의 지도력 강화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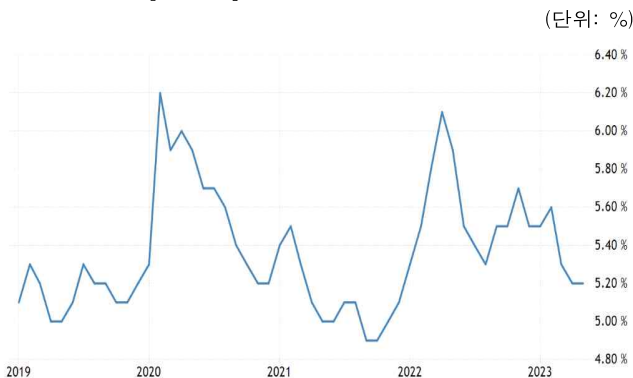
사회안정

청년층 실업률 상승 추세 가속화

- 중국의 2023년 6월 실업률은 5.2%이며, 이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월 6.2% 이후 최고치임. 한편, 중국 정부가 지난 12월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16~24세) 실업률은 2023년 6월 기준 21.3%를 기록하였음. 이는 중국이 청년실업률을 집계하여 발표하기 시작한 2018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대학 졸업자 비율이 전체 청년층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력 수준과 함께 일자리 기대치도 높아졌으나, 중국 산업구조는 여전히 1,2차 산업 비중(2021년 기준 약 45%)이 높아 청년층이 선호하는 첨단 정보기술 기업이나 국유 금융기업 등의 고급 일자리는 제한적인 것이 청년층 실업률이 상승하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됨.

* 중국 대학 졸업자 수(만 명): 114('01년) → 413('06년) → 631('10년) → 749('15년) → 874('20년) → 909('21년) → 1,158('22년)

[그림 9] 중국의 실업률 추이



자료: Trading Economics

[그림 10] 중국의 청년층 실업률 추이



자료: Statista

사회안정

정부의 강력한 언론 탄압으로 세계언론지수는 180개국 중 179위로 최하위 기록

- 2023년 5월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세계언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 순위에서 중국은 조사대상 180개국 중 179위를 기록할 정도로 자유로운 언론 보도가 제한되고 정부에 의한 강력한 언론 통제가 이뤄지고 있음(참고로 180위는 북한).
- 중국 정부는 인터넷 뉴스 정보를 관리하는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으로, 이 규정은 제작·배포를 엄금하는 11가지 악성 콘텐츠를 명시함. 또한, 중국 정부는 매일 모든 언론에 편집 지침과 검열된 주제에 대한 상세 공지를 내보내고, 중국에서 개발된 앱은 중국 정부의 검열 과정을 거치며, 중국의 SNS인 '샤오홍슈', '웨이보', '위챗 모먼트' 등에서 올라오는 중국 정책에 대한 비판 등은 포스팅할 수 없거나 바로 삭제됨.
 - * 헌법 위배, 국가안보 훼손, 정부 전복, 국가통일 파괴, 국가 이익 훼손, 영웅 열사 정신 왜곡,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선동, 민족단결 파괴, 국가 종교정책 위반, 유언비어 유포와 경제 및 사회질서 교란, 음란·외설·도박·살해 등의 범죄 유포, 명예훼손, 법률에서 금지된 기타 내용을 포함한 정보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개도국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Moody's는 ESG 요소가 중국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거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2. 9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2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6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4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2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6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1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산업 발전이 대기의 질에 미치는 영향, 수질 오염, 토양의 퇴화 등 환경오염 확대와 관련된 관리의 어려움 및 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투자와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음.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관련 정부 정책이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중국은 그간 꾸준한 인구 증가가 경제성장과 공공재정 확보에 기여해 왔으나, 노동연령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됨. 이는 소득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고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어 사회(Soci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지배구조는 특기할 만한 위험요소가 없이 안정적인 편으로, 건전하고 관리 가능한 정부 재정을 바탕으로 환경 및 사회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갖추어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은 다소 긍정적(2등급)으로 평가됨.

국제관계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갈등 지속

- 중국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과 무역분쟁, 기업 제재 등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영유권, 대만 관계 등 다방면에서 갈등을 지속하고 있음.
- 2020년 1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체결로 2018년 3월 이후 약 2년 동안 지속된 양국 간 무역분쟁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서 정한 합의사항(미국산 물품 수입 이행률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다 2020년 8월 회의 이후 점검회의도 개최되지 않아 무역합의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2023년 6월 18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미국 외교수장으로는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미·중 간 갈등이 무력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대화채널 구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뚜렷한 진전은 없어 보임.
- 한편,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다국적 기업들이 대 중국 투자를 보류하고 인근 아시아 국가로 생산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또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PEF*는 주요 원자재, 상품 등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시장 장악을 억제하고 유럽, 아시아 동맹국과 협력하여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며 중국을 위협하고 있음.
 - * 인도 등 14개국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수립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반도체 등 제품의 재고를 교환할 수 있는 매커니즘 구축 중
- 지난해 미국 Apple은 중국 내 생산라인 일부를 베트남으로 옮겼으며, Apple 공급망에 참여한 총 11개의 대만 협력사들도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함. 아울러 삼성전자를 포함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도 중국 인근 아시아 국가의 생산공장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검토하는 등 중국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에 2023년 6월 21일부터 중국 리창 총리가 독일과 프랑스를 찾아 중국과의 협력은 위험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각국의 탈중국화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중임.
- 2023년 5월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쿼드(Quad)* 회의에서 호주를 포함한 4개국 정상들은 중국을 향해 "협박과 강압이 없고 주권을 존중하는 평화롭고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향한다"고 재차 강조함.
 - * 호주, 미국, 일본 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 협의체.
- 한편, 한국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쿼드 가입을 추진하자, 중국은 쿼드를 '배타적, 폐쇄적 소그룹'으로 평가절하하며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면 한·중 간 신뢰를 파괴하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
- 2023년 5월 30일 열린 제20기 중앙 국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서방과의 갈등도 불사하는 사태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함에 따라 향후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국제관계

대만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압박

- 중국 정부는 대만을 중국에서 이탈한 자국 영토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면서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등의 압박을 70년 이상 지속하고 있음.
 - 2023년 4월 8일 중국은 정기적인 군사훈련을 대만섬 주변에서 실시하였으나, 미사일 발사는 없었으며 훈련기간도 3일로 평소보다 짧았음. 이는 대만 총통선거가 2024년 1월로 다가오면서 중국이 압박의 수위조절에 나선 것으로 파악됨.
 - 중국은 대만 총통선거에서 독립의지가 강한 집권 민진당보다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하는 국민당의 당선을 희망하고 있어, 2024년 1월 대만 총통선거 이후 두 국가 간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23년 4월 30일 치러진 파라과이 대선에서 친대만 성향인 산티아고 페냐 집권당 후보가 승리하자 중국은 파라과이 앞 '금전외교'를 앞세워 대만의 수교국을 빼앗아 대만을 더 압박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 대만은 현재 수교국이 13개뿐이며, 파라과이는 남미에서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국가임. 다른 중남미 국가들은 최근 수년 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함.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아세안 5개국 및 대만과 갈등 지속

-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아세안 5개국(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및 대만과 갈등을 겪고 있음. 남중국해에서의 원유·천연가스 개발, 중국의 인공섬 조성 및 해군 배치, 미국의 적극 개입 선언 등으로 남중국해 문제는 역내 국제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임.
-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일명 '구단선')을 그어 전체의 90%가 자국 영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암초 등을 인공섬으로 조성, 군사기지화하고 있음. 한편,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중국의 구단선 주장이 국제법상 전혀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으나, 중국은 판결의 수용을 거부하며 주변국과 갈등 및 대립을 이어오고 있음.

[그림 11]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현황



자료: 글로벌시큐리티

외채상환태도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비교적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중국은 단기외채잔액(2022년 말 1조 4,770억 달러, OECD)의 2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액(2022년 말 3조 1,277억 달러)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기준 10.4%의 낮은 수준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지 않은 편임.
- 한편, 2023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중국의 채무잔액은 단기 113억 달러, 중장기 105억 달러 등 총 218억 달러이며, 이 중 연체액은 26백만 달러(0.12%)로 채무상환태도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2등급 (2023.06)	2등급 (2022.06)
Moody's	A1 (2022.08)	A1 (2020.09)
Fitch	A+ (2022.12)	A+ (2022.06)

OECD와 국제신용평가 3사 모두 기존 등급 유지

- 2017년 Moody's 및 S&P는 잠재성장률 하락, 부채 증가세 지속 등을 이유로 중국의 신용등급을 A1 및 A+로 각각 하향 조정한 바 있음. 이후 평가일 현재까지 OECD 및 주요 3대 국제신용평가사의 등급은 변동 없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중국 경제성장 둔화 예상, 높은 공적채무 비율* 등을 감안하여 국제신인도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공적채무/GDP(OECD) : 53.8%('18) → 57.2%('19) → 70.1%('20) → 71.8%('21) → 77.1%('22) → 82.4%('23)

-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3.0% 이하의 성장에 그쳤던 2020년, 2022년을 제외하면 아시아 평균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자 2022년 12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종료하였으며, 이로 인한 민간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2023년 중국 경제는 5.2%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 시행에 따른 방역비용 증가 등으로 2022년 역대 두 번째로 큰 재정적자(GDP의 -7.5%)를 기록했으며, 2021년 말 기준 중국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72%, 기업(금융 부문 제외) 부채비율은 G20 국가들의 평균 부채비율인 165%보다 높은 214%를 기록함.
- 공산당 1당 독재체제로 정치 안정성은 높은 편이나 언론 통제, 인권 탄압 등으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미국과의 패권 다툼,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 등 다양한 국내외 문제가 상존함.
- GDP 대비 외채 비중은 2022년 기준 13.7%에 불과하고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11.7%로 낮은 수준이며 경상수지 흑자 지속,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 유지 등으로 대외지급능력에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에 대해 직전 등급과 동일한 B2를 부여코자 함.